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 중 “대전광역시·충청남도·충청북도를 포함하는 구역”을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충청북도를 포함하는 구역”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도”를 “특별자치시·도”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도”를 “특별자치시·도”로 한다.

제6조의2제1항제4호 중 “주주로서”를 “자로서”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해산·합병”을 “해산·합병·전환”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자본금의 감소”를 “주식 금액 또는 주식 수의 감소에 따른 자본금의 실질적 감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감소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종전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종전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②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은 본 조에 준용한다.

제10조의2제1항제4호다목 중 “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특별자치시에서 특별자치도로 이전하거나 특별자치도에서 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경우

제10조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취득·양수(실질적으로 해당 주식을 지배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취득등"이라 한다)로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되려는 자는 제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대주주의 요건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세부 요건 중 금융사고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이 조에서 "금융사고방지요건"이라 한다)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등이 기존 대주주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취득등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적격성심사대상 대주주"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대주주의 요건과 금융사고방지요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이 조에서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이라 한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④ 제3항과 별도로 금융위원회는 적격성심사대상 대주주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수시적격성심사대상 대주주"라 한다)가 저축은행 경

영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⑤ 상호저축은행은 수시적격성심사대상 대주주가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의 취득등을 한 자는 승인 없이 취득등을 한 주식(제2항에 따라 주식의 취득등을 한 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주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⑧ 금융위원회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심사 결과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대주주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을 충족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명령(이하 ‘요건충족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대주주가 6개월 이내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요건충족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⑨ 금융위원회는 제8항 본문에 따른 요건충족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요건충족명령을 받지 아니한 대주주에 대하

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대주주가 보유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처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명령(이하 “주식처분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⑩ 제8항 본문에 따라 요건충족명령을 받거나 제9항에 따라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대주주는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⑪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상호저축은행 또는 대주주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대주주 승인
2.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 심사
3. 제6항 또는 제9항에 따른 주식처분명령
4. 제8항에 따른 요건충족명령

⑫ 제1항에서 제11항까지의 승인, 승인신청, 심사, 명령 및 자료제출이나 정보제공 요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제1항제2호 중 “부동산의 소유”를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로 하고, “담보권의”를 “저당권 등 담보권의”로 하며, 같은 항 제2의2호와 제4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한 내에 제2호 단서에 따라 취득한 비

업무용부동산을 처분하지 아니하거나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의뢰하지 아니하는 행위

4의2.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에 포함되지 않을 목적 등으로 우회 출자를 통해 자신이 지분을 출자한 상호저축은행의 주식을 매입하도록 하기 위한 신용공여

제22조의4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가 제2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제23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24조제1항, 제29조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및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는 위반행위가 종료한 날(다수인이 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위반행위의 공소시효가 5년을 넘는 경우에는 그 공소시효 기간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효”라 한다)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② 내부감사, 검사, 검찰·경찰 등의 수사, 행정심판, 소송 등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다만, 소송 이외의 사유로 시효가 정지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한다.

③ 행정심판 또는 소송 등의 결과에 따라 절차상의 흠이나 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조치가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취지에 따라 다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임원의 해임 권고와 직무정지는 병과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제3호 “임원의 해임 권고 또는 직무정지의 요구”를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업무집행책임자(이하 “업무집행책임자”라 한다)는 제외한다)의 해임 권고 또는 직무정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 “직원”을 “직원(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5조의6제3항 중 “자산의 건전성”을 “지급준비예탁금의 운용, 자산 건전성의 분류 및”으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금융위원회는 중앙회 또는 그 임직원이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해임 권고와 직무정지는 병과할 수 있다.

1. 중앙회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게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2.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3. 임원의 해임 권고 또는 직무정지
4. 직원의 면직 요구
5.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일부정지

② 제23조의12의 규정은 전항에 따른 중앙회 임직원에 대한 조치에 준용한다.

제35조제2항제2호 중 “제38조의2”를 “제38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35조의3제1항 중 “제3호”를 “제3호·제4호”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상호저축은행과 서로 교차하여 다른 상호저축은행”을 “상호저축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서로 교차하여 다른 상호저축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한다.

제37조의3제1항 중 “과실”을 “중과실”로 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 또는 대주주등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1. 상호저축은행

가. 상호저축은행이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및 제18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신용공여의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 금액의 100분의 10 이하

나. 상호저축은행이 제18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소유한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30 이하

다. 상호저축은행이 제18조의2제1항제2호의2를 위반하여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소유한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

라. 상호저축은행이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하거나 가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하

2.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이 제1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 금액의 100분의 10 이하

3. 대주주등이 제37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받거나 가지급금을 받은 경우: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받거나 가지급금으로 받은 금액의 100분의 40 이하

②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 제29조제5호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영업정지의 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명령에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기간의 이익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8조의8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금융위원회는 제10조의6제6항 또는 제9항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한 기간 이내에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매 1일당 그 처분하여야 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은 주식처분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주식처분을 이행하는 날(주권교부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처분명령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는 금융위원회가 주식처분명령의 이행을 완료한 날을 확인한 후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이의 납부를 통지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주식처분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고서도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매 9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장부가액의 범위와 산정방법,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제38조의3부터 제38조의7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제5항제5호 중 “제10조의6제4항 또는 제8항”을 “제10조의6제6항 또는 제9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18조의2제1항제11호”를 “제18조의2제1항제2호, 제2호의2, 제11호”로 한다.

제39조제6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의2, 제14호를 신설한다.

1. 제10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7의2. 제22조의5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서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내용을 제출한 자

14. 제2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방법서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중전의 제40조제1항제1호를 제40조제1항제1호의2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제10조의6제11항 후단 또는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  
의 자료제출 또는 정보제공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 또는 정보제공을 한 자

제40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40조제3항 중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중전 제1호의2를 제1  
호의3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25조의2제2항 또는 제25조의3제2  
항”을 “제25조의3제2항”로 한다.

1의2. 제15조를 위반하여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제40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금융감독  
원장으로 하여금 부과·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와 관련한 사항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1> 제9호 중 “제10조제2항”을 “제10조제3항”으로 하고, 제16호 중  
“제10조의6제3항 후단”을 “제10조의6제11항”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12, 제37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에 대한 적용례) 제10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사유로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업무용부동산 처분기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시행 이전에 제18조의2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의 경우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제18조2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과징금 및 과태료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부칙 제3조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적용을 제외하고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 ①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은 주된 영업소(이하 “본점”이라 한다) 소재지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한다. 1. ~ 5. (생략) 6. <u>대전광역시 · 충청남도 · 충청북도를 포함하는 구역</u>  ② (생략)	제4조(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 ①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u>대전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충청남도 · 충청북도를 포함하는 구역</u>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 ① 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1. · 2. (생략) 3. 본점이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있는 경우 : 40억원  ② (생략) 1. · 2. (생략) 3. <u>도 또는 특별자치도</u>  ③ (생략)	제5조(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 ① ----- ----- -----. 1. · 2. (현행과 같음) 3. ----- <u>특별자치시 · 도</u> -----  ②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u>특별자치시 · 도</u>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인가의 요건) ① 제6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 3. (생략)

4.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생략)

제10조(인가 사항) ① (생략)

1. 해산·합병

2. (생략)

3. 자본금의 감소

<신설>

제6조의2(인가의 요건) ①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

-----

-----

-----자로서-----

-----

-----

-----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인가 사항) ① (현행과 같음)

1. 해산·합병·전환

2. (현행과 같음)

3. 주식 금액 또는 주식 수의 감소에 따른 자본금의 실질적 감소

4.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감소

<신 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0조의2(신고 사항 등) ① 상호  
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미리 금융위원  
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본점 또는 지점등을 동일한  
영업구역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나. (생략)

다. 특별자치도에서 도로 이전  
하거나 도에서 특별자치도  
로 이전하는 경우

라. (생략)

<신 설>

5. (생략)

②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은 본 조에 준용  
한다.

③ ----- 제1항 또는 제2항  
-----.

제10조의2(신고 사항 등) ①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라. (현행과 같음)

마. 특별자치시에서 특별자치  
도로 이전하거나 특별자치  
도에서 특별자치시로 이전  
하는 경우

5.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제10조의6(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①·② (생략)

③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대주주의 요건과 금융사고방지요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이 조에서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이라 한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하면 상호저축은행 또는 대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신설>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의6(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적격성심사대상 대주주”라 한다)-----  
-----  
-----  
-----  
-----  
----- 한다.

④ 제3항과 별도로 금융위원회는 적격성심사대상 대주주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수시적격성심사대상 대주주”라 한다)가 저축은행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⑤ 상호저축은행은 수시적격성

심사대상 대주주가 대주주적격  
성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  
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  
고하여야 한다.

④ · ⑤ (생략)

⑥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대주주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을 충족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⑦ 제6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대주주는 상호저축은행의 의결

⑥·⑦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8) ----- 제3항 또는 제4항-  
-----  
-----  
-----  
-----

----- 내용으로 하는  
명령(이하 ‘요건충족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 다만, 해당  
대주주가 6개월 이내 대주주적  
격성유지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한 경우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요건  
충족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다.

(9) 금융위원회는 제8항 본문에  
따른 요건충족명령을 이행하지



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⑧ 금융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대주주가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대주주가 보유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요건충족명령을 받지 아니한 대주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대주주가 보유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처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명령(이하 “주식처분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⑩ 제8항 본문에 따라 요건충족명령을 받거나 제9항에 따라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대주주는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⑪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상호저축은행 또는 대주주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⑨ 제1항에서 제8항까지의 승인, 승인신청, 자료나 정보의 제공요구 및 명령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금지 행위) ①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2. 업무용부동산 외의 부동산의 소유. 다만,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대주주 승인

2.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 심사

3. 제6항 또는 제9항에 따른 주식처분명령

4. 제8항에 따른 요건충족명령

⑫ 제1항에서 제11항-----  
----- 심사, 명령 및 자료제출이나 정보제공 요구-----  
-----  
-----.

제18조의2(금지 행위) ① -----  
-----  
-----.

1. (현행과 같음)

2. 업무용부동산 외의 부동산 (이하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 --- 저당권 등 담보권의-----  
-----.

2의2.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한 내에 제2호 단서에 따라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을 처분하지 아니하거나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

3. · 4 (생략)

<신설>

5. ~ 11. (생략)

② · ③ (생략)

제22조의4(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 ① · ② (생략)

<신설>

<신설>

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의뢰하지 아니하는 행위

3. · 4 (현행과 같음)

4의2.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에 포함되지 않을 목적 등으로 우회 출자를 통해 자신이 지분을 출자한 상호저축은행의 주식을 매입하도록 하기 위한 신용공여

5. ~ 11.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의4(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가 제2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제23조의12(제재시효) ① 제24조 제1항, 제29조에 따른 임직원에게 대한 조치 및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는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위반행위의 공소시효가 5년을 넘는 경우에는 그 공소시효 기간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효”라 한다)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② 내부감사, **검사**, 검찰·경찰 등의 수사, 행정심판, 소송 등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다만, 소송 이외의 사유로 시효가 정지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한다.

③ 행정심판 또는 소송 등의 결과에 따라 절차상의 흠이나 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조치가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취지에 따라 다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행정처분) ① 금융위원회  
는 상호저축은행 또는 그 임직  
원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거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  
치를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1. 2. (생략)

3. 임원의 해임 권고 또는 직무  
정지의 요구

4. 직원의 면직 요구

5. (생략)

② (생략)

제25조의6(회계의 원칙) ① ②  
(생략)

제24조(행정처분) ① -----

-----

-----

-----

-----

-----

-----

-----

-----

-----

-----. 이 경우 임원

의 해임 권고와 직무정지는 병

과할 수 있다.

1. 2. (현행과 같음)

3.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업무집행책임자(이하 “업무집  
행책임자”라 한다)는 제외하  
다)의 해임 권고 또는 직무정  
지

4. 직원(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  
한다)의 면직 요구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의6(회계의 원칙 등) ① ②

② (현행과 같음)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지급준비예탁금의 수입 및 운용 업무와 관련하여 자산의 건전성, 대손충당금의 설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29조(중앙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금융위원회는  
중앙회 또는 그 임직원이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후  
단 신설>

1. · 2. (생략)

### 3. 임원의 해임 권고 또는 직무 정지의 요구

#### 4. 5. (생략)

## <신 설>

제35조(권한의 위탁) ① (생략)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권한

③ -----  
-----  
----- 지급준비예탁  
금의 운용, 자산건전성의 분류  
및 -----  
-----  
-----.

제29조(중앙회 및 그 임직원  
에 대한 행정처분) ① -----  
-----  
-----  
-----  
-----.

이 경  
우 임원의 해임 권고와 직무정  
지는 병과할 수 있다.

1. · 2. (현행과 같음)

3. ----- 해임 권고 또는 직무  
정지

4. · 5. (현행과 같음)

② 제23조의12의 규정은 전항에 따른 중앙회 임직원에 대한 조치에 준용한다.

제35조(권한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을 행사할 때 상호저축은행(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제37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알게 된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필  
요한 행정조치를 건의하여야 한  
다.

1. (생략)

2. 제3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3. 4. (생략)

제35조의3(퇴임한 임원 및 퇴직한  
직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  
회(제35조제1항에 따라 제24조  
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29조  
제1호·제3호의 조치 권한을 위  
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상호  
저축은행 및 중앙회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24조  
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29조  
제1호·제3호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상호저축은  
행 또는 중앙회에 통보할 수 있  
다.

-----  
-----  
-----  
-----  
-----  
-----  
--.

1. (현행과 같음)

2. 제38조의2제1항 -----  
-----

3. 4. (현행과 같음)

제35조의3(퇴임한 임원 및 퇴직한  
직원에 대한 조치) ① -----  
-----  
----- 제3호 · 제4호 -----  
--- 제3호 · 제4호-----  
-----  
-----  
-----  
-----  
----- 제3호 · 제4호 -----  
----- 제3호 · 제4호-----  
-----  
-----  
-----  
-----  
--.

② (생 략)

제37조(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금지) ① (생 략)

②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 및 예금등의 금지 또는 가지급금의 지급 금지를 피할 목적으로 다른 상호저축은행과 서로 교차하여 다른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등에게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의3(임원 등의 연대책임)

①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상호저축은행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의 예금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② (생 략)

제38조의2(과징금의 부과)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 동일계열 상호저축은행 또는 대주주등이

② (현행과 같음)

제37조(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상호저축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서로 교차하여 다른 상호저축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

제37조의3(임원 등의 연대책임)

① -----  
----- 중과실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  
-----  
-----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상호저축은행

가. (생략)

<신설>

<신설>

나. (생략)

2. 3. (생략)

<신설>

-----  
-----  
-----.

1. -----

가. (현행과 같음)

나. 상호저축은행이 제18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소유한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30 이하

다. 상호저축은행이 제18조의2제1항제2호의2를 위반하여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소유한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

라. (현행 나목과 같음)

2. 3. (현행과 같음)

②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 제29조제5호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영업정지의 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명령에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③ 금융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주식처분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고서도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매 9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한다.

<신 설>

④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는 제38조의3부터 제38조의7까지의 규정을 준용한

행을 완료한 날을 확인한 후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이의 납부를 통지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주식처분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고서도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매 9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장부가액의 범위와 산정방법,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다.

제39조(벌칙)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략)

5. 제10조의6제4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위반한 자

7.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각각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한 자(제18조의2제1항 제11호를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8. ~ 11. (생략)

사항은 제38조의3부터 제38조의7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1. 2. (현행과 같음)

⑤ -----  
-----  
-----  
-----.

1. ~ 4. (현행과 같음)

5. 제10조의6제6항 또는 제9항  
-----  
-----

7. -----  
-----  
-----  
-----  
-----(제18조의2제1항 제2호, 제2호의2, 제11호-----  
-----).

8. ~ 11. (현행과 같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를 위반하여 지급준비  
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2. 3. (생략)

⑦ (생략)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1. 제10조의6제3항 후단 또는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 7. (생략)

<신설>

⑥ -----  
-----  
-----  
-----.

<삭제>

2. 3.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제40조(과태료) ① -----  
-----  
-----  
-----.

1. 제10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보고한 자.

1의2. 제10조의6제11항-----  
-----  
-----  
-- 또는 정보제공 요구에 따  
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  
료제출 또는 정보제공을 한  
자

2. ~ 7. (현행과 같음)

7의2. 제22조의5제1항 또는 제3  
항에 따른 보고서 또는 자료

8.~ 13. (생 략)

<신 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4. (생 략)

5. 제22조의5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서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내용을 제출한 자

6.·7.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신 설>

1의2. 제18조의7을 위반하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직원에게 불이

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내용을 제출한 자

8.~ 13. (현행과 같음)

14. 제2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방법서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② -----  
-----  
-----.

1.~ 4. (현행과 같음)

<삭 제>

6.·7. (현행과 같음)

③ -----  
-----  
-----.

1. (현행과 같음)

1의2. 제15조를 위반하여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1의3. -----  
-----  
-----

<p>익을 준 자</p>	<p>-----</p>
<p>2. (생 략)</p>	<p>2. (현행과 같음)</p>
<p>3. <u>제25조의2제2항 또는 제25조의3제2항을 위반한 자</u></p>	<p>3. <u>제25조의3제2항</u> ----- -----</p>
<p>4. · 5. (생 략)</p>	<p>4. · 5. (현행과 같음)</p>
<p>④ (생 략)</p>	<p>④ (현행과 같음)</p>
<p><u>&lt;신 설&gt;</u></p>	<p>⑤ <u>금융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부과·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와 관련한 사항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p>